

보도자료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ttps://kihasa.re.kr>

배포일시 2024년 7월 15일(월)

보도일시 **즉시**

매 수 총 11매

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 제44권 제2호 발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강혜규)은 한국연구재단 KCI(Korea Citation Index·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 학술지인 『보건사회연구』 제44권 제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20편의 논문과 『보건사회연구』 편집위원인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의 논설이 실렸다.

Editorial

생애 주된 일자리 고용기간 연장의 의의와 한계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Policies Extending the Employment of the Main Job in One's Life

▣ 주요내용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천만 노인 시대 진입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기간 연장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를 완화하고, 노인부양비 증가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고령자는 이미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더 늦은 시기까지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있어, 노동시장 참여를 어떻게 확대해야 할지 답하기 어렵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중심에는 생애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이 있다.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은 고령자의 인적자본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생애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생애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 정책만으로는 필요한 수준의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를 달성하기 어렵다.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을 정책 패키지 형태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수준의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애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의무 재고용제도와 같은 중간 단계의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생애 주된 일자리 고용기간 조정의 간접적인 효과에도 주목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하는 고령자 비중을 높이고, 취약한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높이는 정책이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

『보건사회연구』 제44권 제2호 게재논문 목록

순서	논문제목	저자 (* : 교신저자)
1	가구분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추 정과 정책 방향	강성호(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
주요 내용	주요 용어: 가구분화, 지니계수, 노인빈곤율, 소득효과, 분화효과	
	<p>이 연구는 왜 했을까? 흔히 우리나라 노인가구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퇴직 후 급격한 가구소득의 감소뿐만 아니라 자녀의 결혼비, 교육비 등으로 노후자산이 소진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해 왔다.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퇴직 전후에 자녀 가구와 분화되는 과정에서, 거시적으로는 소득, 자산에는 변화가 없지만, 미시적 측면에서 가구분화는 노인가구의 추가적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 초점을 둔 경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국가 전체적으로 소득 감소가 없지만, 가구 자체의 분화 현상만으로 사회적 위기지수로 이해되는 노인빈곤율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 소득변화 요인을 제외한 순수 가구분화로 인한 노인빈곤율과 불평등 효과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p> <p>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고령가구에서 젊은 가구원의 분화가 발생하면 분화 전에 비</p>	

	<p>해 원가구인 고령가구의 빈곤율은 증가하고 사회불평등 또한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과정에서 소득 증가에 따른 효과인 소득효과를 제거한 순수 가구분화 효과를 추정함에 따라 선행연구들과 차별된 분석 방법을 통해 가구분화에 따른 순 노인빈곤 및 불평등 효과를 추정하였다.</p> <p>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노후소득보장 정책 추진에 있어 가구분화 등을 고려하는 가족 정책을 동시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p>	
2	성인 화상 생존자 보호자의 의료기관 기반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	황세희(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박소영(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주요 내용	<p>주요 용어: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화상 생존자, 보호자</p> <p>이 연구는 왜 했을까? 화상 생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화상 생존자 보호자들은 높은 수준의 돌봄 부담과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화상 생존자의 원활한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해 보호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화상 생존자 보호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들의 욕구에 기반한 지원 서비스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화상 생존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기반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경험과 욕구를 파악하였다.</p> <p>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성인 화상 생존자 보호자들은 심리사회적 상담과 경제적 상담을 주로 이용하였고, 모든 상담 영역에서 필요성 인식 정도가 서비스 이용도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기타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도는 화상 생존자의 성별, 화상 원인, 화상 범위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사회복지서비스 필요성 인식 정도는 화상 보호자의 연령, 화상 생존자의 성별과 연령, 화상 범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p> <p>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성인 화상 생존자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p>	
	3	5세 미만 영유아 세부시기별 사망위험요인과 사망원인 분석: 통계청 5세 미만 영유아 출생사망연계자료를 활용하여(2012~2015년)
주요 내용	<p>주요 용어: 5세 미만 사망, 영유아 사망의 위험요인, 영유아 사망원인, 출생코호트 분석</p> <p>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는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사망자가 372,939명으로 출생자(249,186명)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상황 속에서 건강한 인구 양성을 위한 5세 미만 영유아의 사망위험요인과 사망원인을 분석하여 예방 가능한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p> <p>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5세 미만 영유아의 사망위험요인은 성별, 출생체중, 임신주수, 모태출생아수, 태수, 부모연령, 부모교육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가장 위험한 요인은 5세 미만 영유아의 임신주수와 출생체중이었다. 세부시기별 사망원인의 경우, 영아기 사망(0세 시기 사망)은 선천적 질환이 높고, 유아기 사망(1~4세 시기 사망)은 선천적 질환보다 예방 가능한 외인 사망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발견하였다.</p> <p>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5세 미만 세부시기별(0세, 1~4세)로 영유아 사망의 관련 위험요인과 사망원인이 상이하여 5세 미만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세부시기별 차이를 고려한 모자보건 및 영유아 건강정책이 개발되어 영유아 사망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p>	

4	이주민 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검토: 영유아 보육 및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을 중심으로	장주영(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희주(협성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p>주요 용어: 이주민 가족, 사회통합, 사회보장,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 사회적 배제</p> <p>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한국에서 살기 원하는 이주민 가족이 증가하면서 이들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은 한국 사회에 통합되는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이주민 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활약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주민 가족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인 영유아 보육, 장애인 지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 현재 법과 정책이 어떻게 이주민을 고려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p> <p>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관련 법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들이 결혼이주민과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한국 국적이 없는 이주민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결혼이주민과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도 일부 정책에서는 제외되거나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p> <p>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취약한 이주민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상관 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사회복지 지원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가 더 나은 사회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포용적이고 편견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p>	
5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ICT 활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조직 요인 분석	신준섭(건국대학교 교수) 신유선(건국대학교 박사수료)* 양호정(건국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p>주요 용어: 사회복지 실천현장, 사회복지조직, ICT 활용 의도,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조직 혁신성, 최고관리자 리더십</p> <p>이 연구는 왜 했을까? ICT의 적극적 도입과 활용이 사회복지현장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조직적 맥락의 사회복지 전문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조직혁신성과 최고관리자 리더십이 ICT 활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양적 및 질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p> <p>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양적 연구를 통해 조직 혁신성은 ICT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 ICT 활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관리자 리더십은 조직 혁신성과 ICT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 ICT 활용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은 ICT 활용에 대한 변화 및 도전 지향적인 조직 문화와 최고관리자의 긍정적 인식, 업무 도움 인식 정도를 사회복지사의 ICT 도입과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p> <p>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 활동이 조직적 맥락의 전문 활동이라는 이론적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ICT의 도입과 활용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조직 문화 조성 및 최고관리자의 변화지향적 리더십 향상과 같은 조직 차원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p>	
6	지역약국 신규 도입 서비스에 대한 재정 분석	최한실(성균관대학교 박사후연구원) 권순홍(세필드대학교 연구원) 황태원(텍사스 A&M 대학교 박사과정) 이진형(성균관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p>주요 용어: 약국서비스, 약사전문서비스, 지역약국, 건강보험, 재정 분석</p> <p>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한국은 노인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p>	

	<p>약국에서 약사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지역약국 신규서비스 7가지를 제공하려면 각각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 알아보았다.</p> <p>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신규서비스의 예상 비용을 높게 만드는 주된 이유는 신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서였다. 가격이 높은 신규서비스라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약국의 수가 적으면 비용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이 적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약물사용 안전교육, 다학제 만성질환 사업 참여, 금연상담, DUR 사후관리, 포괄적 약력관리, 취약계층 방문 약료 서비스, 복약지속을 위한 모니터링 상담 순이다.</p> <p>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신규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비용을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예상 이용자 수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획득해야 한다. 시범사업을 진행하거나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지역약국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p>
7	<p>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규모화와 사업체 특성 변화 연구</p> <p>함선유(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수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하태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p>
주요 내용	<p>주요 용어: 사회서비스, 규모화, 법인화, 범위의 경제</p> <p>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대다수는 규모가 매우 작은 업체이며, 이러한 기관의 영세성은 사회서비스의 질과 이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규모가 변화할 때 인력의 고용 형태와 조직유형, 사업 내용의 다양성이 이뤄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p> <p>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노인요양시설과 보육시설은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때 상용직 비율이 늘어났지만, 종합복지관 운영업과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은 규모가 늘어날 때 상용직 비율이 줄었다. 종합복지관과 방문복지서비스업은 규모가 커질 때 사업 내용의 다양화가 확인되었다.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과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은 사업체 규모가 늘어났을 때 영리기업으로의 변화가 관측되었다.</p> <p>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데이터의 한계로 확인하지 못한 종사자의 임금 수준 및 노동시간,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매출액에 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p>
8	<p>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직무요구-자원 모형을 중심으로</p> <p>유진선(경북대학교 박사과정) 이유진(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사)* 공보경(경북대학교 석사과정)</p>
주요 내용	<p>주요 용어: 직무열의, 직무요구, 직무자원, 의료사회복지사</p> <p>이 연구는 왜 했을까?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에는 환자가 치료를 잘 받고 퇴원하여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내에서 다시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 인력의 수가 적고, 지원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 병원과 지역의 기대와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의료사회복지사가 의료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직무열의와 직무자원, 직무요구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열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p> <p>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제공되는 직무자원 중 자율성과 사회적 지</p>

	<p>지가 직무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직무요구는 직무열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율성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p>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의료사회복지사의 직무열의 향상에 기여하여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특히 의료사회복지 인력 기준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더불어 부서의 인력구성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사회복지 직무 설계 시 직무 범주와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사회복지사의 근무연차에 따른 교육과 지원체계의 차별화 또한 필요할 것이다.</p>	
9	음주규범이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음주기대의 매개효과	박정선(인제대학교 박사과정) 손창우(인제대학교 교수) 김광기(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p>주요 내용</p>	<p>주요 용어: 음주규범, 음주기대, 음주행동, 매개효과, 계층적 주량빈도 측정 방법</p> <p>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음주행동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들의 영향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음주규범이나 음주기대와 같은 요인들이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 받는 관계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계층적 주량 빈도 측정법으로 측정한 음주행동에 음주규범이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 규범이 음주기대와는 어떤 방식으로 음주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려고 전국을 대표하는 국내 성인 표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p> <p>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음주규범은 음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음주기대는 음주규범과 음주행동 사이를 부분 매개하였다. 음주규범은 그 자체로도 알코올 소비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음주기대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알 수가 있었다.</p> <p>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음주폐해를 예방 감소시키려면 음주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음주규범과 음주기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홍보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어진 상황별로 어떤 음주규범이 바람직한 것인지와 부정 및 긍정음주기대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p>	
10	팬데믹의 인식과 대응이 지역주민의 신체활동과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정현(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p>주요 내용</p>	<p>주요 용어: 사회적 자본, 팬데믹 인식 및 대응, 신체활동, 구조방정식, 매개효과</p> <p>이 연구는 왜 했을까? ? 본 연구는 전 세계를 위협한 COVID-19 팬데믹의 인식과 대응이 개인의 신체활동과 사회적 자본에 미친 영향을 검증에 초점을 둔다. 팬데믹으로 인해 개인의 일상이 제약되고 축적된 사회적 자본이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무너진 일상에 대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연구를 제공한다.</p> <p>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은 신체활동과 사회적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신체활동과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다. 한편, 신체활동은 팬데믹 인식 및 대응과 사회적 자본 간 관계에서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p> <p>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COVID-19 팬데믹과 같이, 미래에 다가올 팬데믹에 대비하여 신체활동과 사회적 자본이 손실되지 않도록 정책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자 지속적</p>	

	인 공공정보 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여 안심을 주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일상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방역수칙이 아닌, 팬데믹의 확산 예방에 초점을 두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사회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11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이상미(동양대학교 교수)
주요 내용	<p>주요 용어: 청소년, 공감, 스마트폰 과의존, 모애착, 자아존중감</p> <p>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공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감 능력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협력에 중요한 사회적 역량으로, 청소년기의 공감 발달은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스마트폰 과의존이 청소년의 공감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자 연구가 진행되었다.</p> <p>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스마트폰 과의존은 초기 청소년의 공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은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을 각각 매개로 하여 공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더불어 스마트폰 과의존이 모애착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초기 청소년의 공감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초기 청소년의 공감 발달을 위해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어머니와 초기 청소년 자녀 간 의사소통 및 상호이해의 촉진 전략을 통해 심리적 친밀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모애착의 증진과 스마트폰 과의존 관리는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공감능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p>	
12	우울장애 진단-자살사망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성근혜(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리) 최진화(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팀장) 이동현(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원) 황태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주요 내용	<p>주요 용어: 자살, 우울장애, 우울장애 진단-자살사망 기간, 자살예방</p> <p>이 연구는 왜 했을까? 우울장애는 대표적인 자살 위험요인이다. 연구진은 우울장애와 함께 자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을 확인해 자살예방 방안을 제안하고자 연구를 수행했다. 생전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자살사망자 210명의 진단 후 자살사망까지의 기간을 파악했고, 어떤 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이 기간이 단축되는지 확인했다.</p> <p>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연구 결과, 대상자의 약 3분의 1(210명 중 81명)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1년 이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증상에 더해 3개월 전 수면 문제 또는 불안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해졌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장애 진단 후 자살사망 기간 단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p>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우울장애 조기 발굴 및 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우울장애 환자의 자살 위험을 평가할 시 최근 수면 문제 또는 불안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p>	
13	비영리 모금기관에 대한 인식과 기부 행위의 관계	최성언(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최수빈(성운대학교 조교수)* 강다운(연세대학교 박사과정)

<p>주요 내용</p>	<p>주요 용어: 비영리 모금기관 인식, 기부 참여, 기부 노력, 다항로지스틱 분석, 토빗회귀 분석</p> <p>이 연구는 왜 했을까? 이 연구는 사람들이 비영리 모금단체에 기부하는 행동에 비영리 모금기관 인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기부자들이 비영리 모금기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기부를 더 많이 하게 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p> <p>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첫째, 사람들이 관계있는 비영리 모금기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시적 기부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전반적 비영리 모금기관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정기 기부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두 인식이 함께 작용하면 기부 참여 확률이 높아진다. 넷째, 관계있는 모금기관에 긍정적이면 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이 높아진다.</p> <p>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비영리 단체는 기부자들의 신뢰를 얻고 긍정적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비영리 단체가 협력할 필요와 기부 행위별 촉진을 위한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해야 기부 행위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또한 개별 모금단체와 전체 비영리 모금단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기부 행위를 촉진할 수 있다.</p>	
<p>14</p>	<p>자립지원전담인력의 주체성 지향 <자립지원 사례관리> 실천을 위한 실행연구</p>	<p>정선욱(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임세희(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상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수경(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p>
<p>주요 내용</p>	<p>주요 용어: 주체성, 자립준비청년, 실행연구, 자립지원전담인력,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자립지원 사례관리</p> <p>이 연구는 왜 했을까? 보호종료아동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으로 불리는 이들의 자립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연구가 시작됐다. 본 연구는 청년의 참여, 선택, 자율적 판단, 자기 삶의 주도, 자기 결정 등을 보장하는 자립지원을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로 명명하였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행하는지에 대한 실행연구를 통해,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란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실천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p> <p>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현장 연구진과 함께 한, 2년간의 실행연구를 통해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을 위한 7대 실천원칙 즉,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 인정, 넓은 의미의 자립 정의, 작은 성취 경험의 기회 제공, 실패와 수정의 인정, 차별 없는 지원, 관계의 지속성, 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 적용 관련 이슈를 확인하고, 실천원칙 실현을 위한 실천목표를 탐색적 수준에서 구성하였다</p> <p>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가 주체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인력에 대한 교육, 슈퍼비전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체성 지향의 <자립지원 사례관리>가 가능한 토양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취업과 진학 등을 중심으로 자립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의 변화, 자립지원전담인력 대 자립준비청년의 비율 축소 등이 요구된다.</p>	
<p>15</p>	<p>부모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전이관계</p>	<p>안선경(이화여자대학교 박사수료) 정의중(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강진아(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김소연(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p>

<p>주요 용어: 스마트폰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 부모와의 대화 시간, 잠재 프로파일, 횡단 잠재전이분석</p>	<p>이 연구는 왜 했을까? 스마트폰 보유 및 미디어 초기경험 연령이 급속도로 하향됨에 따라 부모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과의존의 원인을 자녀의 개인적인 문제로 초점화하여 대안을 탐색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폰의 초기경험과 모델링의 주요 대상인 부모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어떠한 양상으로 전이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p>	<p>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 특성이 유사하였으며, 특히 부모와 자녀 모두 '내성'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패턴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적 특징이 밀접할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낮은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부모와 자녀가 경험하는 스마트폰 의존도 특성이 유사함에 따라 가족 중심의 동시적 개입이 필요하며, 특히 자녀의 스마트폰 초기경험 시 가정에서 스마트폰 교육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부모교육과 가정 내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 실천 중심의 온라인 교육 개발 및 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질적인 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친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p>
<p>16</p>	<p>가족돌봄청년 일상의 재구성과 정서적 경험</p>	<p>노혜진(강서대학교 조교수)</p>
<p>주요 용어: 가족돌봄청년, 영케어러, 돌봄 민주주의, 일상재구성법</p>	<p>이 연구는 왜 했을까?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특성이나 돌봄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정보는 축적되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이 매일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삶을 구성하는 매일매일의 활동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정서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해보고 싶었다.</p>	<p>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108명의 청년에게 3일의 일상 경험 자료를 모았고, 1,932개의 일화를 분석한 결과, 가족돌봄청년들이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은 이른 아침과 늦은 밤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청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는 주로 돌봄과 관련되어 있지만, 긍정적 정서는 사람들과 어울림, 학습 등의 활동과 관련됨을 발견하였다.</p> <p>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가족돌봄청년들에게 긍정적 정서와 연관된 활동으로써 사회적 지지체계 유지와 강화를 위한 온오프 프로그램 활성화, 학습 및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돌봄이 부정적 정서적 경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도 필요하다.</p>
<p>17</p>	<p>토픽모델링과 의미연결망을 이용한 국내 언론의 마약 보도 주제와 경향 분석</p>	<p>백혜진(한양대학교 교수) 정유미(서울여자대학교 SI교육센터 전임 연구원)*</p>
<p>주요 용어: 의제 설정, 프레이밍, 마약, 언론 보도, 토픽 모델링, 의미연결망 분석</p>	<p>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언론 기사를 통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온 마약에 대한 의제를 살펴보기 위해 14년에 걸친 마약 관련 신문기사를 분석하였다.</p>	<p>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마약 관련 보도는 연예인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사 수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불법 마약과 관련해서는 '경찰', '검찰' 등 범죄 및 수사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타났으며,</p>

	<p>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는 프로포폴과 같은 특정 의약품이 연예인들의 사건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대마의 경우는 범죄와 관련된 주제 외에도 대마 산업, 합법화 이슈 등이 나타나 마약 유형별로 나타나는 의제에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예방, 치료 등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는 언론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p> <p>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언론은 연예인 중심의 마약 사건을 주로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마약 관련 제도 및 예방의 문제까지 폭넓은 이슈를 다룰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마약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넘어 예방, 관리 및 치료를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p>	
18	<p>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 관한 종단연구</p>	<p>신성희(인제대학교 박사학위) 이선우(인제대학교 교수)*</p>
주요 내용	<p>주요 용어: : 주관적 행복감, 여가활동, 패널회귀분석(혼합모형),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p> <p>이 연구는 왜 했을까? 한국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국제 비교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12년째 자살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이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p> <p>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아동·청소년패널조사 가운데 중학교 1학년 학생 2,590명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여가활동의 변화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을 때, 독서 시간, 운동 및 신체활동 시간, 친구와 노는 시간, 교외 동아리활동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교내 동아리활동은 오히려 행복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외 동아리활동의 높은 긍정적 영향과 대비되는 결과로 학교와 학교 밖의 동아리 운영 형태 차이를 주요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p> <p>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청소년이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거기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확보, 사회적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동아리활동 등의 운영도 청소년의 욕구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p>	
19	<p>다자녀정책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의 댓글 분석</p>	<p>배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p>
주요 내용	<p>주요 용어: 다자녀, 다자녀정책, 인식, 토픽모델링, 뉴스 기사, 댓글</p> <p>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정부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등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뉴스 등 언론에서도 다자녀 출산은 애국이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 가구의 부모는 사회적 인식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등 정부의 정책과 정책수요자의 인식은 다소 거리가 있다. 따라서 다자녀정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의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다자녀정책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자료로 분석하였다</p> <p>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일반 대중들은 다자녀정책을 인구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재정운영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보이는 등 정책 신뢰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혜택 및 지원에 대한 체감도 향상, 직장안정과 경력보장 등의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 주거 안정, 유연한 성역할과 젠더갈등 해소, 돌봄 및 교육 지원 등의 정책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p>	

	<p>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녀수가 많은 다자녀 가구를 배려하고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배리어프리적인(barrier-free) 정책 설계가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녀수와 무관하게 누구나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적(universal design)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공감대와 상호신뢰에 기반해야 한다.</p>	
20	<p>부산시 소지역 주민참여 건강사업의 형성과 발전 과정: 건강반송사업 이후 15년</p>	<p>윤태호(부산대학교 교수)</p>
주요 내용	<p>주요 용어: 소지역, 참여, 자원협력, 건강사업, 건강형평성</p> <p>이 연구는 왜 했을까? 부산시 주민참여 건강사업이 지난 15년간 어떠한 경로를 통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는지, 당면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였으며, 해결되지 않는 한계점들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주민참여 건강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p> <p>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건강반송사업으로부터 시작한 부산시 주민참여 건강사업이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요인은, 건강반송사업으로부터 형성되어 온 소통과 공감의 주민참여에 기반한 건강사업의 일관된 수행과 이를 가능하게 한 지자체의 정책 지원, 전문적 지원조직의 운영 그리고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이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자체 자체 예산 확보의 한계, 활동 인력의 고용구조 불안정성, 지역복지사업과의 중복성 인식 등이었다.</p> <p>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나라 지역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보다는 지역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 형성으로서의 주민참여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p>	

□ 게재된 논문은 『보건사회연구』 웹사이트(<https://www.kihasa.re.kr/hswr/>)에서 전문을 바로 볼 수 있으며, 추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